

10 개 금융기관의 정리계획은 누가 쓰고 누가 승인하나

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회사가, 부실정리계획은 예금보험공사가 쓴다

연구소의 판단

연구소는 이 제도의 요점이 계획의 내용이 아니라 작성과 승인의 분리에 있다고 본다.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회사가 쓰고 부실정리계획은 예금보험공사가 쓰며, 승인은 금융위원회가 한다. 다만 예금자보호법 제 38 조의 4 제 3 항은 최소비용의 원칙을 벗어난 자금지원을 허용한다. 그 예외가 남는 한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예상도 남는다.

01 · 확정된 사실

금융위원회는 2026 년 7 월 15 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 곳의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.

항목	값	비고
승인 대상	금융기관 10 곳	금융위원회, 2026.7.15
자체정상화계획 승인	2026 년 4 월 15 일	
부실정리계획 승인	2026 년 7 월 15 일	
2027 년도 선정 결과	은행지주회사 5 곳·은행 5 곳	금융위원회 2026.7.31, 5 개 부문 12 개 평가지표
추가자본 적립의무	1%	2027 년 선정 기관
공적자금 누적	지원 168.7 조원 · 회수 123.0 조원	1997.11~2026.6 말, 회수율 72.9%

근거는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이다. 금융위원회는 올해 보완한 사항으로 세 가지를 적었다. 금융기관의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체계 점검,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 강화, 합동 모의훈련을 통한 시장위기 대비 강화다. 같은 자료는 하반기 중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금융위원회는 2026 년 7 월 31 일 2027 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. 은행지주회사 5 곳과 은행 5 곳이다.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 지점,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5 개 부문 12 개 평가지표로 영향력을 평가했다. 정책금융기관 두 곳은 공공기관 특성을 이유로 제외했다. 선정된 기관에는 1%의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. 같은 자료는 2025 년과 동일한 결과여서 실질적 추가 적립 부담은 없다고 적었다.

02 · 왜 이런 구조인가

두 문서는 쓰는 데가 다르다. 금산법 제 9 조의 2 는 금융위원회가 해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도록 정한다. 기준은 기능, 규모,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,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. 제 9 조의 3 은 선정된 금융기관이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도록 정한다. 통보받은 날부터 3 개월

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낸다. 제 9 조의 4 는 금융감독원장이 그 계획을 예금보험공사에 보내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해, 3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한다.

부실정리계획을 쓰는 데는 금융회사가 아니다. 제 9 조의 5 는 예금보험공사가 자체정상화계획을 받은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이를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내도록 정한다. 제 9 조의 7 은 금융위원회가 두 계획과 평가보고서를 2 개월 이내에 심의해 승인 여부를 정하도록 한다. 미흡하면 기간을 정해 다시 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. 앞의 문서는 스스로 회복하는 방법이고, 뒤의 문서는 회복이 되지 않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다.

작성 주체를 나눈 이유는 정리 비용을 누가 대는지에 있다. 예금자보호법 제 30 조 제 1 항은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등 잔액에 대통령령 요율을 곱한 금액을 해마다 보험료로 내도록 정한다. 제 36 조의 3 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정리금융회사를 세우도록 하고, 자본금은 예금보험기금에서 전액 낸다. 돈을 대는 데가 처리 방법을 쓴다.

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예상 자체가 값을 바꾸기 때문이다. 부실해져도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다고 보는 예상이 있으면, 그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는 실제 위험보다 낮게 매겨진다. 조달비용이 낮아지면 같은 이익을 얻는 데 필요한 위험의 크기가 커진다. 정리계획을 미리 승인해 두는 것은, 공적자금 투입을 전제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함을 문서로 확인해 두는 절차다.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97 년 11 월부터 2026 년 6 월 말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168.7 조원이다. 회수액은 123.0 조원이고 45.7 조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.

그 예상을 법이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. 예금자보호법 제 38 조의 4 제 1 항은 최소비용의 원칙을 정한다.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가장 적은 방법을 쓰라는 것이다. 제 3 항은 예외를 둔다. 예금보험위원회가 부실금융회사의 청산이나 파산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, 제 1 항 외의 방법도 쓸 수 있다. 중요하다고 선정된 기관일수록 이 요건에 해당하기 쉽다. 연구소는 정리계획의 실효성이 이 예외 없이 처리가 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.

03 ·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

정리 단계에서 뭉치 갈리는 사람은 셋이다. 보호한도를 넘는 예금을 한 금융회사에 둔 사람, 그 금융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을 산 사람, 주식을 가진 사람이다. 예금자보호법 제 2 조 제 2 호는 예금등을 예금과 적금,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으로 한정한다. 사채는 그 목록에 없다.

제 32 조 제 1 항은 보험금을 지급공고일 기준 예금등 채권 총액에서 그 금융회사에 진 채무 총액을 뺀 금액으로 정한다. 제 2 항은 한도를 1 억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. 한 금융회사에 1 억 2,000 만원을 예금하고 같은 금융회사에서 3,000 만원을 빌렸다고 하자. 제 1 항을 적용하면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9,000 만원이다.

확인할 수 있는 것은 승인 사실까지다. 금융위원회 2026 년 7 월 15 일 발표문에 적힌 것은 계획을 승인했다는 사실과 올해 보완한 세 가지, 하반기 모의훈련 계획이다. 어느 예금과 어느 채권이 어떤 순서로 손실을 지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. 금산법 제 9 조의 2 부터 제 9 조의 10 까지도 선정과 작성, 평가, 심의, 승인, 애로요인 해소 요구, 협조 의무를 정할 뿐이다. 손실 분담의 순서를 정하는 조문은 이 절에 없다.

04 · 무엇이 안 막히는가

- 승인된 계획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. 금융위원회 2026 년 7 월 15 일 발표문에 적힌 것은 승인 사실과 보완사항 세 가지, 하반기 합동 모의훈련 계획까지다. 어느 예금과 어느 채권이 어떤 순서로 손실을 지는지는 국민이 확인할 수 없다.

- 금산법 제 9 조의 8 은 금융위원회가 정리에 예상되는 애로요인의 해소를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받도록 정한다. 어떤 애로요인이 지적됐고 어떻게 해소됐는지를 공개하도록 정한 조문은 제 9 조의 2 부터 제 9 조의 10 까지 없다.
- 예금자보호법 제 38 조의 4 제 3 항의 예외 요건은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다. 그 판단은 예금보험위원회가 한다. 어느 정도가 그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.

05 · 지금 할 일

국민

- 거래 중인 상품의 통장과 약관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한다. 같은 금융회사에서 산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은 사채이므로 그 문구가 붙지 않는다.
- 한 금융회사에 예금과 대출을 함께 두고 있다면 각각의 잔액을 적어 둔다. 예금자보호법 제 32 조 제 1 항은 예금 총액에서 채무 총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.
- 금융위원회가 해마다 7 월에 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·은행지주회사 선정 결과 발표문에서 올해의 선정 기관 수와 명단을 확인한다.

금융회사

-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용 문서로만 두지 말고, 계획에 적은 유동성 지표와 사이버 침해 대응 절차를 실제 업무 절차와 맞춰 둔다. 구조가 크게 달라지면 금산법 제 9 조의 3 에 따라 지체 없이 다시 제출한다.

당국

- 승인 사실만 알리는 지금의 발표 형식을 다시 본다. 정리 단계에서 예금과 후순위채, 주식어떤 순서로 손실을 지는지의 일반 원칙을 함께 적는 방안을 검토한다. 개별 기관의 계획 내용을 밝히지 않고도 순서는 알릴 수 있다.

갈림길

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· 하반기 중 실시하기로 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의 범위와 결과 공개 여부. 금융위원회 2026 년 7 월 15 일 발표문에 적힌 것은 실시 계획까지다.

A 로 가면 · 훈련 결과와 함께 정리 단계의 일반 절차와 손실 분담 순서가 공개되는 경우다. 예금자와 채권 보유자는 자기 몫이 어느 단계에서 정해지는지를 미리 알 수 있다.

B 로 가면 · 실시 사실만 알리는 형식이 반복되면,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올해도 계획을 승인했고 훈련을 했다는 사실까지다.

어디를 보면 아는가 · 하반기 발표문에 훈련 시나리오와 참여 기관, 점검 결과가 적히는지, 실시 사실만 적히는지

함께 읽을 것

란	편
금융제도	금융회사 부실 정리 절차 예금자보호제도 보험계약 이전과 계약이전제도 금융감독 체계
금융상품	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(영구채) 정기예금

란	편
금융사건	예금자 3 만 8,000 명이 6,268 억원을 잃었다 예금인 줄 알고 산 채권 8,571 억원이 사라졌다 부실 지정 3 년 만에 124 만 계약이 옮겨졌다 나라중금 한 곳에서 2 조원의 공적자금이 사라졌다
피해 구제	불완전판매 다투기 무료로 도움받는 법

근거와 검증

확인한 사실·숫자	등급	출처
금융위원회 2026.7.15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 개사의 자체정상화계획·부실정리계획 승인. 자체정상화계획 2026.4.15 승인, 부실정리계획 2026.7.15 승인. 근거는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	1 차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구조개선정책관 구조개선정책과 2026.7.15 발표 원문 전제 https://eiec.kdi.re.kr/policy/materialView.do?num=284330
2026 년 보완사항 세 가지 —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체계 점검,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 강화, 합동 모의훈련을 통한 시장위기 대비 강화. 하반기 중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 계획	1 차	위 동일 자료 본문 확인 https://eiec.kdi.re.kr/policy/materialView.do?num=284330
2027 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·은행지주회사 선정 — 은행지주회사 5 개사·은행 5 개사. 국내 은행·외은지점·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5 개 부문 12 개 평가지표로 영향력 평가. 정책금융기관 2 개는 공공기관 특성상 제외. 추가자본 적립의무 1%. 2025 년과 동일한 결과로 실질적 자본 적립 부담 없음	1 차	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2026.7.31 발표 원문 전제. 개별 기관명은 원고에 쓰지 않았다 https://eiec.kdi.re.kr/policy/materialView.do?num=284978
금산법 제 9 조의 2 — 금융위원회가 매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며, 기능·규모·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·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	1 차	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 9 조의 2 조문 원문 확인 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71463&cseq=2315786
금산법 제 9 조의 3 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통보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. 사업·조직 구조에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지체 없이 다시 제출	1 차	같은 법 제 9 조의 3 조문 원문 확인 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71463&cseq=2315787
금산법 제 9 조의 4 — 금융감독원장이 자체정상화계획을 예금보험공사에 지체 없이 송부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해, 접수일부터 3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	1 차	같은 법 제 9 조의 4 조문 원문 확인 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71463&cseq=2315788
금산법 제 9 조의 5 — 예금보험공사가 자체정상화계획을 받은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부실정리계획을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	1 차	같은 법 제 9 조의 5 조문 원문 확인 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71463&cseq=2315789
금산법 제 9 조의 7 — 금융위원회가 자체정상화계획·	1 차	같은 법 제 9 조의 7 조문 원문 확인

확인한 사실·숫자	등급	출처
평가보고서·부실정리계획을 2 개월 이내에 심의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, 미흡하면 기간을 정해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		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71463&cseq=2315791
금산법 제 9 조의 8 — 금융위원회가 정리 시 예상되는 애로요인의 해소를 요구할 수 있고, 해당 기관은 정해진 기간에 조치를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한다	1 차	같은 법 제 9 조의 8 조문 원문 확인. 제 9 조의 2~제 9 조의 10 의 조문 제목은 선정·작성·평가·심의위원회·심의와 승인·애로요인 해소 요구·조치 이행·협조 의무이며 손실 분담 순서를 정한 조문은 없다 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71463&cseq=2315792
예금자보호법 제 2 조 제 2 호 — 예금등의 범위는 예금·적금·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으로 열거되며 사채는 포함돼 있지 않다	1 차	「예금자보호법」 제 2 조 조문 원문 확인 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72887&cseq=2389158
예금자보호법 제 32 조 제 1 항·제 2 항 — 보험금은 지급공고일 기준 예금등 채권 총액에서 채무 총액을 뺀 금액이며, 한도는 1 억원의 범위에서 1 인당 국내총생산과 보호 예금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	1 차	같은 법 제 32 조 조문 원문 확인. 2025.1.21 개정 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72887&cseq=2389215
예금자보호법 제 30 조 제 1 항 — 부보금용회사가 예금등 잔액에 1 천분의 5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간 보험료로 납부하며, 요율은 경영·재무 상태 등을 고려해 차등한다	1 차	같은 법 제 30 조 조문 원문 확인 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72887&cseq=2389209
예금자보호법 제 36 조의 3 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정리금융회사를 설립하며, 그 자본금은 예금보험기금에서 전액 납입한다	1 차	같은 법 제 36 조의 3 조문 원문 확인 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72887&cseq=2389230
예금자보호법 제 38 조의 4 — 제 1 항 최소비용의 원칙(예금보험기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), 제 3 항 예외(위원회가 청산·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 항 외의 방법 가능), 제 4 항 세부사항 대통령령 위임	1 차	같은 법 제 38 조의 4 조문 원문 확인 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72887&cseq=2389240
1997 년 11 월부터 2026 년 6 월 말까지 공적자금 누적 지원 168.7 조원, 누적 회수 123.0 조원, 회수율 72.9%	1 차	금융위원회 「2026 년 2 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」 (2026.7.22) 원문 전제. 기준일 2026.6.30 https://eiec.kdi.re.kr/policy/materialView.do?num=284480
미회수 공적자금 45.7 조원	파생	168.7 조원 - 123.0 조원 = 45.7 조원. 위 금융위원회 자료의 누적 지원액에서 누적 회수액을 뺀 값이다
예금 1 억 2,000 만원·대출 3,000 만원일 때 상계 후 기준 금액 9,000 만원	파생	1 억 2,000 만원 - 3,000 만원 = 9,000 만원. 예금자보호법 제 32 조 제 1 항을 가정한 금액에 적용한 산술 예시이며 실제 사례가 아니다

본문 분량	검증 항목	1 차 자료	추적 예정
2,597 자	17 건	15 건 (88%)	6 개월 뒤

추적할 때 볼 것 · 하반기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의 결과가 어떤 형식으로 발표되는지, 정리 단계의 손실 분담 순서에 관한 일반 원칙이 공개 자료에 들어가는지, 2027 년도 자체정상화계획·부실정리계획의 승인 시점과 보완사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

정정 없음

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과 견해이며, 어떤 감독기관이나 금융회사의 공식 입장도 아닙니다.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·매도·가입·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,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본문의 사실관계와 수치는 발행일 기준이며, 근거는 위 검증표에 밝힌 자료에 한합니다.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
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